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 용 수
공주대학교 교수

I.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과 특성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영수익사업은 1970년대 말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천모래·자갈채취 사업을 시작으로 자치경영 영역에 등장하였다. 경영수익사업은 십여년 전까지는 이미 공급해 오던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대금·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들어 심각한 주택난과 주차난 등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과 주

운영사업의 확대를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개념은 학문상 또는 실정법상 유래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기업적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것이므로 그 개념 정의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익목적 실현과 그 결과로서의 수입발생을 동시에 도모하는 비기업적 경영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나 몇 가지 점에서 일반행정이나 지방공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첫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조세가 아닌 쌍무계약적 방법에 의해 징수한다는 점에서 일반행정과는 달리 비권력적 행정 행위이다.

둘째, 일반행정이 공공성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즉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전제 하에서 서비스를 재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이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에 따라 수익을 추구한다 하여도 그 가격 결정은 어디까지나 공익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민간기업이 거의 항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비해,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을 위하여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이 때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는 비용절감을 통한 손실의 극소화(일반회계에의 부담극소화)가 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사업개시의 직접적인 동기가 주민복지의 향상이었으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전통적인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통하여 외부효과가 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경영수익사업은 자원개발과 재원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과 비슷한 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다만 경영수익사업도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공서비스 증대수단으로서의 경

<표-1> 경영수익사업의 분야 및 내용

분 야	목 적	내 용	수입형태
토지개발	택지 등 용지의 안정적 공급	공유수면매립, 하천부지개발, 공동묘지 이전, 저습지매립, 유흥지개발, 하천복개, 석산개발 등	토지판매(공영개발 방식 위주)수입
관 광 유 원 지 개발·운영	쾌적한 휴식공간의 공급	공원개발·운영, 유원지개발·운영, 공원유원지내 주차장 운영, 해수욕장 운영, 약수개발 등	사용료 징수
건설자재 생산·공급	건설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천골재 채취, 해사 채취, 석산골재 채취, 역청공장 운영, 블록양회공장 운영 등	판매수입
공 유 재 산 의 생산적 관리	공유재산을 활용한 서비스공급	각종 회관 등 시설의 생산적 활용, 경영주차장 운영, 유흥지에 골프연습장·잔디포 조성 등	사용료 징수, 판매수입
농림수산 소득증대	농어촌 소득증대 기반 조성	유실수화해재배, 양묘장 운영, 농수산물 직판장·가축시장·도축장·토산물판매장 운영 등	사용료 징수, 판매수입

영수익사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다만 운영근거 및 회계처리상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2. 경영수익사업의 분야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생산하는 서비스는 지역여건, 주민의 선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성질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다.

II. 경영수익사업의 위상

1. 세외수입에 있어서의 경영수익사업의 위상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서비스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외수입의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에 있어 세외수입에의 의존도가 약 절반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를 넘고 있어 이제 조세부담도 거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아무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조세에의 의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세외수입을 통한 재정자금의 확충방안은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면에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의 비중 증대는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세외수입은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입각한 수입원이라고 볼 때 다양화하는 주민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경영수익사업은 실질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익 실현 및 재정수입 확충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선정한 것을 말한다. 자치단체 세입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은 대부분 일반회계 경상적 수입 중 사용료수입과 사업장수입에 속한다.¹⁾ 그리고 일부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직영기업에 의한 수입과 함께 특별회계 수입 중 사업수입에 속한다.²⁾ 다만 직영기업은 지방공기

1) 사용료수입이란 개인이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도로 점용료·사용료, 도축장 사용료, 시설 입장료 등을 말한다. 사업장수입이란 임업시험장, 종축장, 잠종장, 원종장, 보건연구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그 기능 수행에 부수해서 산출되는 묘목, 임목, 잠종, 종축 등 생산물의 매각 임대 및 시험조사 등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2) 사업수입은 특별회계로써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주차장사업, 관광사업, 도축장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등 지방자치

업법 상의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반면 경영수익사업은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세외수입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 조세저항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재원확보 수단으로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적 수입과 사업의 수입은 자치단체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증가시킬 여지가 비교적 작다. 이에 비해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사용료수입이나 사업수입은 제도적 여건이나 중앙정부의 통제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상당부분 부합하므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경영수익사업 전개상의 특징

우리나라 경영수익사업은 실시 초기에는 300건 이하에 불과하였으나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대체로 400건대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들어 500건을 상회한 후 1997년에는 1,000건을 돌파하였다. 경영성과 측면을 보면 이익이 계속 증가해 왔으며 1995년 이후 매년 3천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방재정에의 기여도가 극히 미미

단체가 경영하는 각종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이 중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강제 또는 임의로 법을 적용하여 운영되는 경우 지방공기업인 직영기업이 되며, 사업의 규모가 기준미달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된다.

한 수준이다. 이익률을 보면 1988년까지는 50~6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20~30%대에 머물다가, 1997년부터 전체 사업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한편 관리효율화 노력의 결과로 이익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은 크게 성장해 왔으나 그 내용상 특징은 사업분야별로 크게 상이하다.

우선 토지개발·이용 분야는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 및 건축경기 활성화 여건에 힘입어 1990년대 초 급성장하였으나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사업성격상 불확실성이 크므로 앞으로도 사업건수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분야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정체상태에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 레저 붐이 일어남에 따라 점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투자소요비가 과다하여 앞으로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양적 성장보다는 관리효율화가 금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건설자재 생산·공급 분야는 1980년대 초까지는 활발히 추진되어 전체 사업 중 30~50%의 비중을 점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 이것은 토지개발·이용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경기 하락에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특히 환경문제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성장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분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현재 전체 경영수익사업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차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물소득 증대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1993년 크게 확대된 이후 미미하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근래에 들어 농촌경제활성화 시책이 활발해 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저공해 농수산물의 공급 등 주민건강 보장의 측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 하겠다.

Ⅲ.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 사업목표의 왜곡

경영수익사업은 공익목적 실현과 자체수입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로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국가지방간 세원배분의 재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각종 사용

료·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등 공공성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의 확충만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는 향후 경영수익사업이 수익성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내포하는 것이다.

2. 영역의 과대

우리나라 경영수익사업의 중대한 문제점은 사업영역에서도 나타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수익사업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민간기업으로부터 민원에 봉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즉 지역주민의 가시적인 행정성과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들 중에는 자치경영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가 간혹 눈에 띄는 것이다.

3. 사업분석의 미흡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분석을 하여야 한다. 사업분석(program analysis)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전에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적인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첫째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공익성), 둘째는 수익이 발생할 것(수익성), 셋째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비경합성),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질 것(운영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정밀한 사업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 회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나타나는가 하면 지나치게 수익성만 강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소기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4. 경영의 비전문성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여부는 중장기 경영계획과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적정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얼마나 차질 없이 운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행 경영수익사업은 인건비, 일반관리비와 차입금이자 등이 사업별로 명확히 계산되지 못하는 등 사업별 원가의식이 부족하여 예산집행의 통제와 원가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경영수익사업 담당자는 세외수입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것도 대개 1년이면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애착심을 저하시키고 창의성과 적극성은 물론 전문성의 축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요금수준의 저조

사용료 등 경영수익사업의 요금은 단순히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투자비의 조달, 나아가서는 기술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요금수준은 생산원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물가상승과 소비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재정경제부 등 중앙정부가 소폭의 요금인상만을 허용해 온 것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 요금이 생산원가에도 크게 못 미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투자비의 일부를 조달하기는 커녕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6. 사업평가의 미흡

사업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사업의 집행이나 집행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사후적 검토를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라 한다. 사업평가는 일반적으로 집행관리와 성과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집행관리는 ① 사업의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이를 분석·평가하고, ② 기본계획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하며, ③ 사업 또는 정책의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부진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부진 사유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성과분석은 완료된 어느 특정 사업이나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나아가서는 그

목표의 달성이 실시된 사업이나 정책의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은 지방화시대에 있어 특히 그 의의가 중시되고 있으나 그 개념과 영역의 모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그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난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이 그 본질에 맞게 본래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격차가 발견될 경우 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부족하여 적지 않은 경우 사업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하더라도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IV.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안

1. 사업목표의 다각화

우리나라의 경영수익사업은 그 목적에 있어 수익성에 편중되어 있는 바 그것은 지방재정 확충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는 다양한 것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와 같은 공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기능은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경제력은 매우 취약하며 그것도 해당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

화는 지방자치의 경제적 기반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각종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복지를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지역문제는 복잡·다양화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공공서비스도 매우 다양한 내용을 갖게 되었다.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는 주로 생활서비스, 문화발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이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는 다양한 것으로서 지방재정에의 기여는 오히려 자치경영의 부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공적인 관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영역의 축소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시되어야 할 기준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즉 비경합성이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의 영역을 무한정 확대하여 민간기업의 신규 투자의 욕을 저하시키거나 기존의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앞의 개념에서도 보았듯이 가능한 한 지역의 부존자원의 개발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간토지를 전면 매수·개발하여 서민용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형 호화주택과 같이 사치성을 띠거나 상가처럼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개발하더라도 하천 골재를 모래·자갈로 단순 분류하여 판매하는 것은 건설자재의 생산·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겠으나, 이를 가공하여 레미콘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제조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공공시설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본질에 부합하나, 필요 이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익성에 치중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

3. 사업분석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성, 수익성, 비경합성, 운영가능성을 고려한 후 사업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업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급적 영속성이 있는 사업
- 지방재정의 확충뿐만 아니라 도시환경미화, 보건위생 등 복지증진에 직접·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도상 수익이 가능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

- 급격한 기술적 변혁을 요하지 않는 사업
-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
- 지역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사업
-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업
- 유희·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은 사업
-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
- 기존의 민간기업활동을 저해·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4. 경영의 전문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자원조달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과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별 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여 직접비뿐만 아니라 업무관리비, 금융비용 등이 각 사업별로 정확하게 구분·계리될 수 있도록 장부의 종류와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의 관리 및 회계 분야에 관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회가 보다 많아져야 한다.

한편 인사관리 측면에서 기업회계 등 최소한의 전문지식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있는 우수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내부인력을 개발하고,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전문직렬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적자원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전문직종에 상응하는 대우보장과 함께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한 우수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일반행정관리를 탈피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5.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적용

경영수익사업 관리의 효율화 관점에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관리비 등 제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감량행정·감축관리 등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담당 공무원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단기간 내에 경영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재삼 강조되어야 할 것이 사용료 수준의 적정화를 통해 원가보상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경영수익사업은 어느 정도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서비스공급은 무상이거나 지나치게 저렴하기 때문에 재원 및 소득의 합리적 배분 차원에서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사용료 등의 효율이 원가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 적자폭이 일반예산으로 충당되므로 결국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더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가격·사용료 등의 효율은 그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를 통해 합리

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6. 사업평가의 내실화

현행 제도상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의 경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와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영수익사업의 규모가 대체로 작고 본격적인 기업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평가지표를 단순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사업평가 영역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적합성(adequacy)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의 본질에 부합하며 지역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지 여부를 추진 과정 중에 점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 방식이 적정한가,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가, 지역여건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가 등이다.

효율성(efficiency)은 사업운영체제, 재원 및 기술, 세부계획 등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 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가, 분기별·월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공정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사업추진에 적합한 재원과 기술이 마련되어 있는가 등이다.

효과성(effectiveness)은 애초에 의도하였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한가를 점검하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가, 투자수익율·직원1인당이익율 등 수익성은 어떠한가 등이다.

한편 사업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강화, 연찬회 실시 등을 통해 담당직원의 평가능력을 함양해 나가야 하며,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회계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경영수익사업 평가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내무부. (1988). 경영수익사업총람.
 _____. (1997). 경영수익사업의 기본논리와 표준경영절차.
 배용수. (2000). 지방자치경영론. 서울: 법문사.
 오연천. (1933).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윤영진. (1998). 새재무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시사용어 해설

• 스니커(Sneaker)

컴퓨터 정보도둑을 일컫는 말. 자신의 존재를 뿔뿔이 밝히고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상업주의와 정보독점에 반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암호체계를 깨는 해커(Hacker)와 달리 자기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훔쳐내거나 파괴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말한다. 1987년에 있었던 KGB의 서독간첩단 사건이나 국내에서 일어났던 김재열의 청와대ID 도용 스니커 사건, 95년초 보도됐던 홈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사건 등이 스니커들의 줌도둑질에 해당.